

# 감사결과

---

## 1. 총괄

정보시스템 구축·유지관리 등 전반을 점검하여 기능오류, DB 현행화 및 편리성 등의 개선을 통해 활용성을 향상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.

감사결과 [표]와 같이 총 38건의 위법·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.

[표] 감사결과 현황

구분	계	경고	주의	통보	개선	비고
처분	38	3	1	31	3	

## 2. 주요 지적사항

### 1) 정보시스템 기반 정립 분야

#### ① 제목: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개선 및 전문성 강화 필요

##### □ 판단기준

-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민서비스의 전자화로 국민 편익의 증진,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·효율성의 향상과 정보시스템의 안전성·신뢰성의 확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마련 하도록 규정 (「전자정부법」 제4조)

##### □ 문제점

-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전문성 약화 및 관리·감독 미흡
  - 정보화부서(정보통신과)와 주관·운영부서(사업부서)로 이원화된 관리·운영체계로, 각 사업부서 정보화인력 중 ×%가 비전공자
  - 사업부서 정보화인력에 대한 예산확보·발주·구축·유지관리·고도화 등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등 지원 미흡
  -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용역 수행업체에 대한 실효적 관리·감독 미흡으로 연계되어 준공검사 미흡, 고도화·현행화 미실시로 사용성 저하
- (조치사항) 장비기술국장(정보통신과장)은 기획재정담당관, 혁신행정 법무담당관, 교육훈련담당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[별표] “관리체계 개선방안”을 참조 하여 관리·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 (개선)

#### ② 제목: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기준 및 절차 미 정립

##### □ 판단기준

- 정보기술아키텍처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규정화
  - 추진체계·교육홍보·현행화·품질관리·성과관리·활용체계 및

그 밖에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규정화하여 시행하도록 규정[「전자정부법」 제4조 및 「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·운영 지침」 제12조(행안부, '11년)]

#### □ 문제점

- '20. 2월 「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」을 개정하면서 「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·운영 지침」을 준용하도록만 한 채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절차 등을 미 마련

▶ (조치사항) 장비기술국장(정보통신과장)은 행정규칙 제정업무 등을 철저히 하고,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기준 및 절차 등 마련 (통보)

## 2) 정보시스템 구축 분야

### ① 제목: 수상레저종합시스템 성능테스트 등 사업관리 미흡

#### □ 판단기준

- 발주청은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(「전자정부법」 제57조)
- 준공검사 시 ①기술적용계획표, ②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 여부 및 ③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부적합 사항 조치 여부[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」 제56조 (행안부, '11년 개정)]

#### □ 문제점

- 구축업체 및 감리업체가 제출한 부적합 총 ×건 미이행, 당해 연말까지 조치하도록 하고 검사 합격처리
- 응답시간 관련 성능테스트 점검 미흡
  - 제안서 상 성능테스트 시 동시 사용자 ×명을 ×명으로 설정·점검
  - 전체 기능(×개)을 점검하지 않고 ×개 기능만 점검 합격처리
- △ 감리업체는 구축업체의 부적합 성능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인용·합격처리함에 따라 시험공고 조회 등 3개 기능<sup>1)</sup>에서 응답시간

1) 조종면허 응답시간 초과(3건): 시험공고 조회, 응시원서 변경 이력조회, 조종면허 면허발급현황.

기준 3초를 초과한 × ~ ×초 지연 등으로 행정효율성 저하

## ② 제목: 인사운영시스템 사업관리 미흡

- 준공검사 확인서 상 개발대상 기능 38개 중 ×개 기능이 미개발<sup>2)</sup>된 상태에서 하자기간내 처리하겠다고 합격처리

## ③ 제목: 수상구조사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미흡

-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상 요구사항인 통계기능(자격증·교육기관·교육 현황)과 GPKI공인인증서 미 개발
  - 담당자의 시스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미 개발된 상태에서 하자기간내 처리하겠다고 합격처리

## ④ 제목: 통합장비관리시스템 사업관리 미흡

- 고도화 준공 시(정보통신과) 전체 ×개 기능 중 수리계획관리 등 함정·무기·정보통신·항공 분야 ×건의 기능이 미 개발
    - 사용 불가임을 인지하고도 하자기간내 처리하겠다고 합격처리
  - 산출물인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중 운영자 매뉴얼이 미 제작되었는데도 검사 합격처리
  - 유지관리 제안서상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유지관리업체가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·이행, 그러나 요청 미이행
- (조치사항) “①항” ~ “④항” 관련, 장비기술국장(정보통신과장)은 앞으로 제안내용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한 후 보완하는 등의 업무관행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**(통보)**
- 구조안전국장(수상레저과장, 수색구조과장), 기획조정관(인사담당관), 장비기술국장(장비관리과장) 부적합 사항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 **(통보)**
  - 금회에 한해 준공검사업무 불철저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그 간의 관행 및 보완 진행 중 등을 고려하여 경고 **(경고)**

2) 2020. 12. 28. 구축, 2021. 2. 8. 시스템 추가 기능개발, 시스템 준공 당시 미개발 된 ×개 기능 2023년 12월말까지 보완 추진 중

### 3)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분야

#### □ 판단기준

- 행정기관 등의 장은 대민서비스의 전자화로 국민 편익의 증진, 중복투자의 방지 및 행정업무의 생산성·효율성의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마련[「전자정부법」 제4조]
- 웹사이트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이용 활성화 수준 및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기하여 효율성을 확보[「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」 제4조]
-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취득한 물품은 연 1회 소관 물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[「물품관리법」 제19조 등]

#### □ 문제점

##### ① 제목: ICT기반 선박통신음성 인지분석시스템 관리 운영 미흡

- 본 사업은 ICT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해 시장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는 공공서비스 촉진 시범사업으로, 구축 이후 2년간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성과관리\*대상 이후 사업부서는 유지관리 예산확보, 보급·확산조치 등 검토 부재
- 관제센터의 사용실태를 확인결과, 메인 모니터 등을 VTS센터 사무실 한켠에 방치하는 등 관제사들의 실제 사용을 저조
- 본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국가자산으로 등재된 VHF 단말기(×백만 원/대)를 인천 관내 VTS센터 ×개소, 경비함정 ×척, 민간선박 ×척(여객선·예부선) 등 총 ×곳에 설치·운영하면서 민간선박의 경우 ×대(약 ××백만 원)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데도 정기재물조사 당시 정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관리 미흡

▶ (조치사항) 경비국장(해상교통관제과장)은 선박통신 음성인지분석 시스템의 활용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사업지속 여부를 명확히 하고 (통보)

- 재물조사 업무 불철저 관련자 주의 (주의)

## ② 제목: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관리 운영 미흡

- (지능형 시스템) 다중이용선박(여객선·예인선), 함정에 보급한 단말기 및 화재경보 장치 운용대수 감소등으로 운용지속여부 재검토 필요
  - 고장·폐선·타 시스템 기능중복 등으로 단말기 ×% 불용 및 예정으로 ×% 만 운용 중
  - 화재신호연동장치 ×대 중 ×% 만 운용 중, ×대 불용예정
- 유지관리 제안서 상 장애발생 시 6시간 내 복구하도록 명시, 관리미흡
  - 최근 3년간 총 ×회에 걸쳐 최대 ×일까지 장애처리 지연
  - 10개 상황센터<sup>3)</sup>에 설치된 VHF-DSC 및 REMOTE 장비에 대해 최근 3년간 ×회에 걸쳐 ×일 ~ ×일간 복구 지연
- 또한 관리대장 없이 사업을 관리해 점검대상이 누락되는 등 관리미흡
  - '19년 장비철거함정(▽함, ▽▽함)이 '20년에 점검한 것으로 기재
  - '21년 점검함정(▽▽▽)이 '22년 점검대장에서 누락되어 미 점검
- 더욱이, 원거리 감시추적시스템<sup>4)</sup>과 운항 중인 선박의 위치확인이라는 동일 목적(동일 서버)의 기능이 유사, 고도화 미흡
  - 지능형시스템이 구축된 동일한 경비함정에 설치하여 사업추진 예정

▶ (조치사항) 경비국장(해상교통관제과장)은 지능형시스템의 단말기 감소, 고도화 미흡 및 원거리 감시추적시스템과의 유사기능 등을

3) 10개 해경서(인천·태안·군산·부안·목포·제주·통영·부산·울산·포항) \* 목포서는 임자·흑산도 2개 기지국 설치

4) 원거리 감시추적시스템: 상황실의 선박위치(AIS 등) 정보를 경비함정에 전송하고, 경비함정의 GPS 정보, 추적 중인 AIS/RADAR 표적 정보를 상황실로 전송하는 시스템.('11. 9. 구축)

고려하여 사업 지속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,  
장애조치 시 유지보수팀에서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방안(복구  
지연 시의 지체상금 부과여부 포함) 마련 (통보)

### ③ 제목: 상황실 상황관리 PC 노후화 조치 미흡

- 전국 상황실 PC ×대 중 노후화된 PC ×대의 교체 지연
  - 내용연수(5년) 초과(×대) 및 도래(×대) 중이나 예산 확보 부족
  - △ 상황실 근무자 대다수가 PC 노후화로 불만 표출 및 신고접수·  
전파·대응 차질 우려

▶ (조치사항) 경비국장(종합상황실장)은 상황처리용 노후화 PC가  
신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(통보)

### ④ 제목: 통합신고처리시스템 유지관리업체 운영 및 감독 미흡

-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팀이 장애조치를 실시
  - 상주대상 인력(2명)<sup>5)</sup>이 근무장소를 벗어나 출장(×회) 업무 병행, 미 관리
- 녹취서버·접수 오류 등 고장신고 접수 후 2시간 내 도착, 4시간 이내  
복구 완료하도록 명시
  - 총 ×회에 걸쳐 도착시간이 최대 ×시간 지연되는 등 장애 조치  
대응체계 미흡(위약금 부과 시 도착시간 적용 제외로 명시)

▶ (조치사항) 경비국장(종합상황실장)은 장애조치를 상주인력 외  
유지보수팀에서 이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조치체계 마련,  
관리감독 철저 (통보)

### ⑤ 제목: 의무경찰 전자인사기록시스템 운영 유지 필요성 재검토

- 최초 구축 이후 고도화하지 않고 현재까지 장기간 운영하면서

5) 상주인력(2명): 본청(중부권 관할) 1명, 대구 공동관리센터(남부권) 1명



- 응답속도 지연 및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는 등 잦은 문제점\* 발생
- '23년 6월 의무경찰 폐지로 관련 민원서류는 온나라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여 민원처리 필요 등 의무경찰 전자인사기록 시스템 운영 유지 필요성 재검토 필요

▶ (조치사항) 운영지원과장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병적기록은 병무청으로 이관하고, 승선경력증명서 등 민원 발급 대상 서류는 온나라 기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해당 시스템 지속 운영유지 필요성 재검토 및 의무경찰 전역자 대상 민원업무 처리방안 마련 (통보)

#### 4) 유지관리비 산정 및 관리·감독 분야

##### □ 판단기준

-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[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의2 등]
- 정보화사업 집행 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은 「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」를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[계약예규 「예정가격작성기준」 및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]

##### □ 문제점

##### ① 제목 :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산정 미흡

- 발주계획 수립 당시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면서 대가산정 가이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임의 산정
- 장애 발생에 따른 오류복구 시 24시간 이내 처리(0점)하도록 요구하면서 실제 비용 산출 시 12시간 이내 처리기준(6점)으로 적용
- 유지관리 정기점검 기준을 12회 이하(14점)로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12회 초과(27점)로 부여하는 등 '22년~'23년(2년간) 총 ×원을 비용을



과다 계상, 총 비용을 산정하여 입찰·계약업무 추진

- ▶ (조치사항) 해양오염방제국장(방제기획과장)은 앞으로 과업 이행 내용과 산출내역서가 불 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, 재발 방지대책 마련 (통보)

## ② 제목 :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산정 미흡

- '17 ~ '21년 기간 중 유지관리비 산출 시 요율제 방식으로 산출 하여야 하나[「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」]
  - 투입공수 방식으로 잘못 적용, 비용산출이 부정확하게 산정
- '22년, '23년 산출내역서 작성 시 타 정보시스템 연계 난이도(과소 산정 ×원)와 오류복구 신속성(과다산정 ×원)의 산정오류로 총 ×만 원 과다 계상, 총 비용을 산정하여 입찰·계약업무 추진

- ▶ (조치사항) 구조안전국장(수색구조과장)은 앞으로 과업 이행내용과 산출내역서가 불 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, 재발 방지대책 마련 (통보)

## 5) 전자기록물의 자료 이관·폐기 분야

### ① 제목: 전자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미흡

#### □ 판단기준

#### 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

- 전자기록물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관리기준표(관리기관·법령·시스템·데이터·업무·기록관리정보(보존기간))를 작성·운영해야 함 [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(‘20. 10. 시행)]
-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, 보존방법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[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의3, (‘20. 10. 시행)]

##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

-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시스템<sup>6)</sup>에서 생산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리 대상 [「공공기록물법 시행령」 제2조]
  -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「공공기록물법」 적용 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관리[2023년 기록물관리 지침(공통매뉴얼) 국가기록원]
- ## ③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이관 및 폐기 절차
-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경우 물리적 이동 없이 그 기록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[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4항,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]
  -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조회,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<sup>7)</sup>의 심의를 거쳐야 함[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, 같은법 시행령 제43조]

## □ 문제점

-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, 보존방법 등 관리에 필요한 자체 행정규칙 미 개정
    - 관리기준표 작성 공문만 하달하고 행정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 미흡
    - 정보시스템별 관리부서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미 작성
- (조치사항)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자체 행정규칙을 개정하고, 관리 또는 제외 대상 정보시스템을 선정 후 관리기준표를 작성하도록 관리방안 마련 (개선)

## ② 제목: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미흡

- ① 시스템 웹페이지를 통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신고 접수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5년·10년으로 게재하였으나, 보유기간 만료 후

6)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·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제공·송신·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·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.

기록물법에 따라 보존기간 책정 및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보관('08년부터)

- 관리기준표 미 작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미 폐기

② 시스템 웹페이지를 통해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신청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3년으로 게재하였으나, 보유기간 만료 후 기록물법에 따라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보관('17 ~ '19년 생산자료)

- 관리기준표 미 작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미 폐기

③ 응급환자 신상·생체정보 및 처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[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]

- 보존기간 만료 후 기록물법에 따라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보관('08 ~ '19년 생산자료)

- 관리기준표 미 작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미 폐기

④ 어선출입항시스템에 등록한 승선자명부의 보존기간을 1년으로 지정하였으나, 보존기간 만료 후 기록물법에 따라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관('20. 7 ~ '21년 생산자료)

- 관리기준표 미 작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미 폐기

▶ (조치사항) 구조안전국장(수상레저과장, 해양안전과장, 수색구조과장)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고 보존기간 경과 시 이관·폐기 등 적절한 조치방안 마련 (통보)

### ③ 제목: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기록물 관리 미흡

① 상황실에서 생산·접수하는 상황보고서 등의 자료는 기록물의 관리 등에 따라 1년간 보존하도록 명시[「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

규칙」 제32조]

-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미 작성으로 전자기록물 폐기 불가
- 상황보고서 약 ×만 건('09 ~ '21) 장기보관

② 국민만족도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녹취록·응답자료 등 모든 전산자료는 1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[「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」]

-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미 작성으로 전자기록물 폐기 불가
- 접촉고객정보 ×중('20~'21년) 장기보관

▶ (조치사항) 경비국장(종합상황실장), 기획조정관(혁신행정법무담당관)은 전자기록물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고 기록물 보존기간 경과 시 이관·폐기 등 적절한 조치방안 마련 (통보)

## 6) 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분야

제목: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종료에 따른 최신버전 고도화 추진 미흡

### □ 판단기준

- 웹사이트의 개발·개선·유지보수 및 운영에 웹 표준기술 사용
  -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하는 등 웹 표준을 준수('17년 제정)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[「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」 및 「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」 등]

### □ 문제점

- '22. 6월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서비스 공식종료되어 34개 정보시스템 실태 점검
  - 웹 표준 근거가 마련('17. 12. 29.)되기 전에 구축된 V-PASS 등 8개 정보시스템은 크롬·엣지 등 최신 브라우저로 고도화 미 검토

## ➤ (조치사항)

기획조정관(인사담당관), 경비국장(종합상황실장, 해상교통관제과장), 구조안전국장(해양안전과장, 수색구조과장) 및 운영지원과장은 정보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보안취약 및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웹표준 준수 관련 고도화 방안 마련, 장비기술국장(정보통신과장)은 해경청 전체 정보시스템의 웹 표준 준수 관련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이행 관리방안 마련 **(통보)**

## 기 정보시스템 현행화 분야

### ① 제목: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 승선원 실명인증 현행화 미흡

#### □ 판단기준

- 해경청장은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·효율성 향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[「전자정부법」 제4조]

#### □ 문제점

- '22. 7월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해 어선출입항시스템 내 실명 확인 서비스 시행 이후 승선원 등록 시 실명인증 정보를 확인 하여 수정할 것을 쏘 해경서에 지시(2회)
  - 그런데 다수의 실명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, 승선원 신원 및 전화번호·주소 불일치로 사고대응 혼선 초래 우려
- (조치사항) 구조안전국장(해양안전과장)은 20개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승선원 실명인증 및 주소·전화번호 등 승선원 정보 및 실명 현행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,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의 승선원 실명인증 현행화 관리 방안 마련 **(통보)**

### ② 제목: 수상레저활동 신고자 개인정보 입력방법 개선

-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상 원거리 등 수상레저활동신고 접수 시  
실명인증 방법 부재로 실명과 전화번호 불일치에도 정상 접수  
- 긴급상황 발생 시 신원파악 및 사고대응 혼선 초래
- (조치사항) 구조안전국장(수상레저과장)은 정보시스템 상 수상레저활동  
신고자 정보가 불 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현행화 방안 마련 (개선)

### ③ 제목: 통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 미흡

- 차량·무기·소모품·피복·정보통신장비·항공유 보유현황 불일치  
및 함정·항공기 기기부속 위치정보 현행화 미흡  
- 기기부속 위치정보 현행화 미흡으로 매년 인사발령 이후 신규  
직원이 기존에 입력된 시스템 재고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움
- 함정·항공 등 ×개 분야 ×개 업무 ×개 세부단위 업무 중  
×개 세부단위 업무 미사용 또는 일부 사용
- (조치사항) 장비기술국장(장비관리과장)은 차량·무기·소모품 등  
물품 현행화 및 시스템 상 미사용 기능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  
방안을 마련 (통보)

## 8) 정보시스템 통계관리 분야

### 제목: 정보시스템 통계와 대외공표 통계 등 불일치

#### □ 판단기준

- 데이터의 최신성·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
[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]
-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데이터의 무결성·일치성 등을  
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[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  
운영 지침」 제4조]

- 통계는 정확성 · 시의성 · 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[「통계법」 제2조]

#### □ 문제점

- '16 ~ '20년 기간 중 조종면허 통계가 해양경찰 백서 통계와 상이
    - 취득자 수(+×), 필기(-×) · 실기시험 응시현황 및 면제교육 이수현황 (+×)
  - '20 ~ '23년 기간 중 유형별 수상레저사고 현황은 통계포털 자료집 통계수치와 상이
    - 침몰 · 전복 · 좌초 · 표류(-×) · 충돌 · 기타(+×)
  - '19 ~ '21년 기간 중 어선출입항현황 통계가 해양경찰 백서 통계와 상이
    - 어선출입항 현황 ×만 ~ ×만척 상이
- (조치사항) 구조안전국장(수상레저과장, 해양안전과장)은 시스템의 통계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해양경찰백서, 해양치안빅데이터 통계포털 등 다른 통계자료와 다르게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 (통보)

## 9)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접수 및 관리 분야

### ① 제목: 승선자명부 전자 신고서 접수방식 운영 미흡

#### □ 판단기준

- 정보시스템 구축 시 대민서비스의 전자화, 국민편익의 증진, 중복투자의 방지 및 행정업무의 생산성 · 효율성의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[「전자정부법」 제4조]
-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 · 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항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함
  - 낚시 어선업자는 승객이 작성한 승선자명부(전자문서 신고서 포함)를



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(파출소)하여야 한다고 규정[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3조 및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」 제20조]

□ 문제점

- ① 휴대폰 문자를 활용한 승선자 명부 전송으로 행정효율 저하
    - 휴대폰 문자로 접수된 사진파일을 파출소에서 시스템으로 수동 전송·등록·승인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, 화질저하에 따른 승선자 정보 인식오류 등으로 행정업무 효율 저하 발생
  - ② 낚시해앱 사용을 권장하나, 사용을 저조
    - 선장 및 낚시객 노령화(앱등록거부감)와 고객관리 목적 등으로 기존 문자(사진파일)전송을 선호하고, 낚시해앱 홍보 부족 등으로 사용저조
  - ③ 이와 별도로 PC·모바일에서 웹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 중
- (조치사항) 구조안전국장(해양안전과장)은 다양한 방식의 전자문서 신고방법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결정하여 조치방안을 마련 (통보)